

# 방역과 생계 사이 '코로나 딜레마'

### 보건의료인 "인력 부족·업무 과중 속 헌신 강요"...9월 2일 파업 예고 자영업자들 "더 이상 못 버텨" 광주시청 앞서 생존 지원책 마련 촉구 벼랑 끝 내몰린 삶 호소 잇따라...코로나 장기화 속 해법 찾기 고심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과 한계에 달한 의료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재산권을 제약받으면서까지 국민 안전을 위해 영업금지·제한조치를 충실히 따라왔음에도, 소극적인 지원에 그치는 정부에 대해 불만을 토해내고 있으며 보건의료인들도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 관심을 촉구했다.

◇보건의료인, "더 이상은 못 버틴다"=전남대병원 등 광주·전남지역 의료인들을 비롯, 전국 134개 의료기관 122개 노조지부는 중앙노동위원회와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지난 17일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15일 간의 쟁의조정기간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찬반 투표를 거쳐 다음달 2일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힌 상태다.

현장 인력을 늘리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라는 게 이들 요구다. 1년 6개월 간 코로나19 사태에 묵묵히 환자를 돌보던 간호사 등 의료인력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실정이라는 게 이

들 주장이다.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간호사 1인당 많은 곳은 40명이 넘는 환자를 담당하는 등 업무량이 늘었지만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노동환경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희생과 헌신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3교대 간호사의 80%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고 신규 간호사의 46%가 1년 안에 그만 두고 있다"면서 "의료인력 갈아넣기로 의료인력의 소진·탈진·이탈이 속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인력확충과 처우개선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전남대·조선대병원을 비롯, 목포·순천·강진의료원, 광주지독병원, 천주의성요양병원,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 광주시립요양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등의 노조원들이 12개 지부 5600여명에 이른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확진자 감소세도 뚜렷하게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시스템에 부담은 물론 환자 불편

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들은 감염병전문병원의 조속한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해경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 "언제까지 희생만 해야 하나"=광주지역 자영업자 등 10만여 소상공인들도 광주시와 정부를 향한 절박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시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와 정부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통제만 하고 생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며 생존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들은 국민 안전을 위해 영업금지·제한 조치 등 정부의 방역 지침을 충실히 따랐지만 정부의 소극적 지원 정책으로 더 이상 생존하기 힘든 위기 상황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수입이 줄었지만 임대료, 인건비, 전기·수도료 등 고정비를 내야 하는데, 빚내서 감당하는 것도 하루이틀"이라며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임대료 부담은 매출 감소에도 크게 달라지

지 않았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지난해 광주시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깎아줘 재산세를 감면해준 건물주는 610명인 반면, 올해는 상반기 동안 고작 177명에 머물렀다.

버틸 수 없어 폐업을 하려고 해도 폐업 신고가 이뤄지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없고, 대출금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해 '적자'에도 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다는 게 소상공인들 설명이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아 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 기업'을 보증 대상으로 하는 신보 규정에 맞지 않아 보증 철회로 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가 지원하는 폐업 지원 컨설팅 참여자도 급증했다. 폐업지원 컨설팅은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지원(최대 200만원)을 비롯해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 들어서 현재까지 470건에 달해 지난해(2-12월) 지원 수준을 훌쩍 넘겼다.

이정재 광주소상공인연합회장은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지키며 광주시에서 하리는데로 다 했다"면서 "소상공인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현장에 맞는 자유형 방역 도입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9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어려움과 대책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18일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 기아차 취업 사기 목사 징역 4년 6개월 선고

기아차 취업 사기에 관여한 목사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19일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3)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취업 알선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장로 B(59)씨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목사 C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아차 취업을 도와주겠다고 구직자 222명에게 모두 21억 원을 받아 일부는 D(36)씨에게 전달하고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를 받았다.

D씨는 기아차 협력업체에 다니다가 돈을 주고 정구직으로 채용된 것처럼 주변을 속였고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인 A씨로부터 소개받은 교인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취업 사기 행각을 벌여 135억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3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로 B씨는 피해자들에게 취업보증금을 500만 원가량 부풀려 요구한 뒤 차액을 자신이 취해 혐의가 인정됐으나 이익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목사 C씨의 경우 박씨와 2016년부터 대여금·투자수익금 명목으로 금전 거래를 했고 자신과 가까운 지인이나 교인을 소개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취업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222명에 달하고 상당수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목사로서 명망을 이용해 취업 브로커로 활동해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동료 아들 부정 학위 취득 도운 조선대 공대 교수들 벌금형 구형

동료 교수 아들의 대학원 출석 사실을 조작, 허위로 학점을 주고 부정하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대 공과대학 교수들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혜택을 받은 아들과 교수인 아버지에게는 징역형이 구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 심리로 열린 조선대 A교수와 아들 B씨 등 11명의 재판에서 A 교수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출석 미달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학점을 주거나 논문을 통과시켜 준 교수 9명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7까지 동료 교수 A씨 아들의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 과정에서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A-A+ 학점을 준 혐의를 받았다. 동료 교수의 아들 한 명을 위해 교수인 아버지를 비롯, 교수 10명이 나서 출석을 인정해주는 특혜 뿐 아니라 고학점을 부여해 석·박사 통합 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를 받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지역예술인 "지방보조금 환수 취소하라" 소송 냈지만 소송 제기 시한 90일 넘겨...법원서 '각하'

지역 예술인이 광주시의 지방보조금 환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에 정해진 90일이라는 소송 제기 시한을 넘긴 점이 한 이유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현)는 예술인 A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결정 취소' 소송을 각하(却下)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광주시로부터 '예술극장 상설공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으로 받은 4억3900만원 중 1억32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쓰는 등 규정을 어기고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광주시의 환수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냈다. 광주시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 나온 이후 형사 재판 과정에서 A씨가 공탁한 금액(5000만원)을 뺀 나머지 보조금 환수를 요구했다.

A씨는 환수대상 보조금을 해외 공연이나 업무 추진비 등으로 썼고 일부 공탁한 점, 그동안 연극계에서 기여한 점 등을 들어 환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보조금 환수 결정을 통보(2020년 11월 20일)받은 뒤 90일 넘은 2021년 2월 23일 소송을 제기해 제소 기간(90일)을 넘겼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행정소송법(20조 1항)상 취소 소송의 경우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

다. 90일째 되는 날은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5일 전인 2021년 2월 18일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각하 판결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가정적'이라는 단서를 달아 본안에 대한 판단도 내놓았다. 광주시가 환수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령 시행 전에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없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령 시행 이전에 마련됐던 구 법의 근거가 있어 '이유없다'고 봤고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극계에 대한 기여를 감안하더라도 감액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sup>2</sup>
- 건 물 : 411 m<sup>2</sup>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540,000,000원

상담 010-3733-3933